

#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국가자격 시험문제

교 시	문제형별	시 간	시 험 과 목
1교시	A	125분	① 노동법(1) ② 노동법(2) ③ 민법 ④ 사회보험법 ⑤ 경제학원론
수험번호		성 명	

## 【 수험자 유의사항 】

1. 시험문제지 표지와 시험문제지 내 문제형별의 동일여부 및 시험 문제지의 총면수, 문제번호 일련순서, 인쇄상태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답은 각 문제마다 요구하는 가장 적합하거나 가까운 답 1개만 선택하고, 답안카드 작성 시 시험문제지 형별누락, 마킹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카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시험시행일(2018. 05. 19.)” 시행 중인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5. 선택과목 득점은 조정산출된 점수만 공개하며, 원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6. 시험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수험자는 QR코드를 통해 가답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설문조사 필수)
2.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SMS(알림톡)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험지 뒷면 ‘개선사항 및 향후 일정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답안 확인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 제1과목 : 노동법(1)

### 1.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헌법은 근로의 권리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근로조건에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③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2. 우리나라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등이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 ②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 ③ 노동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
- ⑤ 노동조합규약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

### 3.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
- ② 근로계약에서 근로의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해제는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 ④ 휴직명령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 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된다.
- ⑤ 전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직(轉籍)으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4.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나,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할 수는 있다.
- ④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⑤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의 금지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5. 근로기준법상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②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했던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사용자는 정신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④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그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②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 ⑤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7.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산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임신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 ③ 사용자는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여성은 보건·의료, 보도·취재 등의 일시적 사유가 있더라도 갱내(坑内)에서 근로를 할 수 없다.
- 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8.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것은?

- ①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 휴가에 관한 서류  
③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④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  
⑤ 임금대장

9.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짝지은 것은?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ㄱ )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 ㄴ )

- ①  $\neg$ : 50,  $\perp$ : 100      ②  $\neg$ : 50,  $\perp$ : 150      ③  $\neg$ : 50,  $\perp$ : 200  
④  $\neg$ : 100,  $\perp$ : 150      ⑤  $\neg$ : 100,  $\perp$ : 200

10. 근로기준법상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에 있어 일용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근로기준법이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국가의 근로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 ④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⑤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② 노동위원회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행정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④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⑤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12.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3.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에 관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때에도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
- ⑤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22. 최저임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되,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②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을 통하여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③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경우

**24. 임금채권보장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은?**

- ①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한 자
- ② 거짓으로 체당금을 받은 자
- ③ 거짓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당금을 받게 한 자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출입국관리법으로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5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2과 목 : 노 동 법 (2)

**26. 헌법상 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법원은 근로3권 중에 단체교섭권이 중핵적 권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②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④ 헌법재판소는 단결권에는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가 포함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⑤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27. 각국 노동법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에는 근로자의 단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 ②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은 단결의 자유를 명문화하였다.
- ③ 미국의 1935년 와그너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문화하였다.
- ④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법은 1953년에 처음 제정되었다.
- 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의제도는 과거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소한의 규모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공제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규약에는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규약의 변경                      ② 해산                      ③ 분할
- ④ 임원의 선거                      ⑤ 조직형태의 변경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다.
- ②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법령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교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단체교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근로조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지 않는 경우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보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일 뿐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 ④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이라도 그것이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집단적 노동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

**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
- ②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하여야 한다.
-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 ⑤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함에 있어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3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양쪽의 신청이 있으면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 ②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③ 일반적 구속력과 관련하여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 ④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은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
- 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등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은 고용노동부에 그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의 연명으로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행정관청이 법령에 따라 당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결정하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②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할 수 없다.
- ③ 단체협약의 당사자 쌍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단체협약의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⑤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의 지역적 확장적용의 결정을 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 ③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있으나 그 수의 제한이 있다.
- ㄴ.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라 하더라도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줄 수 없다.
- ㄷ. 필수공익사업의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 단위로 산정한다.
- ㄹ.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라 하더라도 비노동조합원을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대체할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②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쟁의행위의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구조조정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의 경우 그 쟁의행위에 앞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를 밟아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노동관계당사자는 법령에 의한 사적 조정·중재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재를 행할 수 있다.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긴급조정이 결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긴급조정 결정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철도사업의 업무 중 철도 차량의 운전업무
- ② 통신사업의 업무 중 기간망의 운영·관리업무
- ③ 항공운수사업의 업무 중 창정비 업무
- ④ 혈액공급사업의 업무 중 채혈 업무
- ⑤ 수도사업의 업무 중 배수시설의 운영 업무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부당노동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구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 ④ 관할법원이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하는 경우 결정으로써 한다.
- ⑤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노조전임자를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하여 승격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③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⑤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다.

47.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둔다.
- ②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상임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이 된다.
- ⑤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 ② 공무원의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④ 정부교섭대표는 법령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법령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4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원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교원의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또는 그 밖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봉급을 받을 수 있다.
- ③ 법령에 따른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여야 한다.
- ④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원의 노동쟁의를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를 둔다.

**5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 ③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회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④ 노사협의회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제3과목 : 민법

**5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인지청구권의 포기는 허용되지 않지만, 인지청구권에는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④ 취득시효완성 후 그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가 후에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된다.
- ⑤ 강행법규를 위반한 약정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52.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④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청구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53.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과거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허가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부재자가 사망하면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소멸한다.
- ④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54.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②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물에 미친다.
- ③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 ④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5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 ③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④ 주무관청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6.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 ②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 ③ ‘궁박’에는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
- ⑤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 행위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57.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 ② 소송대리인의 사무원의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 ③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계약의 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58.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ㄴ.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ㄷ. 친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자גיע약이지만 유효하다.
- ㄹ.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59.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추인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 ③ 추인은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본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된다.

60.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④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 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의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61. 사용자 甲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의 근로계약을 추인하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③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추인하면,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그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하다.
- ④ 甲과 乙의 근로계약은 추인여부와 상관없이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로부터 유효하다.
- ⑤ 甲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6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②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③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④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 채권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그 소가 각하된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응소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⑤ 당사자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기산일이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63.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②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통지가 별도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③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낙한 후에도 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 이를 가지고 양수인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다.
- ⑤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양도인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에게 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64.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시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후 소지인이 그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는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 기한 도래 사실의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④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이행지체가 성립된다.

65.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손해는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계약체결시 손해배상액 예정을 한 경우, 그 예정은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 ④ 채권자가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손해의 발생은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손해배상액 예정이 있어도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를 한다.

66. 甲은 乙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丙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5,0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이 반대하는 경우에도 甲은 丙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甲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丙은 乙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甲은 丙에게 5,000만원을 乙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丙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위수령한 경우, 甲은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함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⑤ 甲이 丙에게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乙은 소송당사자가 아니므로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67.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
- ②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④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 ⑤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 의사표시를 앎의 동안에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한 후에는 상계할 수 없다.

68.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해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묵시적 합의로 성립할 수 없다.
- ② 합의해제시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 등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해제 전에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 ④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69. 甲은 자신의 X건물을 매매대금 1억원, 계약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전에 제3자 丙의 과실로 인한 화재로 X건물이 전부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乙은 甲에게 X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乙은 甲에게 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乙은 甲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②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한 경우, 약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약의의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⑤ 매매의 목적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약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1.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토지임차인이 지상물만을 타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가 종료하면 그 임차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건물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소부분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발생한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 ⑤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2. 甲은 자신의 토지에 X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수급인 乙과 체결하면서 甲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공된 X건물의 소유권을 甲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 乙은 X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X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② X건물에 대한 乙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③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④ 乙은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건물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X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7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② 악의의 비채변제라도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 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4.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은 과실책임이다.
- ② 불법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한다.
- ③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명예회복에 적합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④ 중과실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 ⑤ 여럿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분할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 甲은 자신의 X건물을 공인노무사 乙에게 임대하였다. 乙이 X건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중 乙의 사무직원 丙의 과실로 X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은 乙에게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② 甲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甲은 동시에 乙과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乙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乙은 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4과목 : 사회보험법

### 76.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없다.
- ③ 사회서비스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 77.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 ② 사회보장은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부조라 한다.
- ④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78.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법인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정보와 관련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79.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기간이 4년인 자영업자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 ① 90일                      ② 120일                      ③ 150일                      ④ 180일                      ⑤ 210일

80. 고용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은 것은?

- ① 피보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② 이직: 근로계약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을 말하며, 정년퇴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 보수: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⑤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말한다.

81. 고용보험법령상 적용 제외 근로자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    )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 ① 15, 1                      ② 15, 3                      ③ 60, 1                      ④ 60, 3                      ⑤ 90, 1

82.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피보험자가 이직을 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② 이 법의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③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두 개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⑤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83.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수급자격자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자영업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④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⑤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8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조정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면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를 1개월 동안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 ③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5.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된다.
-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④ 폐업사유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 ⑤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 ㄴ. 수급권의 대위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 ㄷ. 보험급여에 관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의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87.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ㄴ.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중에 발생한 사고
- ㄷ.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ㄹ.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8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 ② 2급 장해등급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한다.
- ③ 장의비는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④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보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 ⑤ 요양급여는 소정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 ②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 ④ 요양급여가 지급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건강보험 요양급여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 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9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자는?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②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④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자
- 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는?

- ①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②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거부한 경우
- ③ 보험급여 결정 등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 ④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위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⑤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 제출해야 할 진료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2.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망한 때  
 ㄴ. 60세가 된 때  
 ㄷ. 사용관계가 끝난 때  
 ㄹ.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①  $\neg, \perp$                       ②  $\neg, \perp, \sqsubset$                       ③  $\neg, \sqsubset, \sqsupset$   
④  $\perp, \sqsubset, \sqsupset$                       ⑤  $\neg, \perp, \sqsubset, \sqsupset$

93. 국민연금법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이 (    )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    )세가 되었을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① 1, 55                      ② 3, 55                      ③ 3, 60                      ④ 5, 55                      ⑤ 5, 60

9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그 내용과 사유를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중대한 과실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④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⑤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95.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 ② 휴직으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 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복지공단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고용보험료의 월별 부과
- ② 환수대상이 되는 고용보험료의 지원금의 징수
- ③ 사업주가 법이 정한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 보험료 가산금의 징수
- ④ 사업주가 법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
- ⑤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 ④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② 근로복지공단은 월별보험료의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매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7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보험료의 총액이 500만원이라면 납부기한 전에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9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징수금의 결손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경매가 개시된 경우
- 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ㄷ. 채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ㄹ. 채납처분이 끝나고 채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채납액보다 적은 경우

- ①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10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 )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6개월, 1000분의 15      ② 6개월, 1000분의 30      ③ 1년, 1000분의 15  
④ 1년, 1000분의 30      ⑤ 3년, 1000분의 30

## 제5과목 : 경제학원론

101.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호황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지 않지만 불황기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할 때 종전보다 소비가 줄어든다.
- ②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일생동안의 소득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한계저축성향과 평균저축성향의 합은 언제나 1이다.
- ④ 케인즈의 소비함수에서는 소비가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절대소득가설에 따르면, 소비는 현재의 처분가능소득으로 결정된다.

102. 국민소득 관련 방정식은  $Y = C + I + G + NX$ ,  $Y = C + S + T$  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국민저축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NX는 순수출, X는 수출, M은 수입, S는 민간저축, T는 세금이다.)

C : 8,000	I : 2,000	G : 2,000
X : 5,000	M : 4,000	T : 1,000

- ① 2,200
- ② 2,500
- ③ 2,800
- ④ 3,000
- ⑤ 4,000

103. 화폐발행이득(seigniorag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가 화폐공급량 증가를 통해 얻게되는 추가적 재정수입을 가리킨다.
- ㄴ. 화폐라는 세월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와 같다는 뜻에서 인플레이션 조세라 부른다.
- ㄷ. 화폐공급량 증가로 인해 생긴 인플레이션이 민간이 보유하는 화폐자산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리는 데서 나온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104. 표는 A국 노동자와 B국 노동자가 각각 동일한 기간에 생산할 수 있는 쌀과 옷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리카도의 비교우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다.)

구 분	A국	B국
쌀(섬)	5	4
옷(벌)	5	2

- ① 쌀과 옷 생산 모두 A국의 노동생산성이 B국보다 더 크다.
- ② A국은 쌀을 수출하고 옷을 수입한다.
- ③ A국의 쌀 1섬 생산의 기회비용은 옷 1벌이다.
- ④ B국의 옷 1벌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2섬이다.
- ⑤ B국의 쌀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보다 작다.

105. 리카도의 대등정리가 성립하는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조세징수보다 국채발행이 더 효과적인 재원조달방식이다.
- ②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민간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③ 조세감면으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하면 이자율이 상승한다.
- ④ 조세감면으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민간의 저축이 감소한다.
- ⑤ 재원조달방식의 중립성이 성립되지 않아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다.

106. 통화승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화승수는 법정지급준비율을 낮추면 커진다.
- ② 통화승수는 이자율 상승으로 요구불예금이 증가하면 작아진다.
- ③ 통화승수는 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들이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 ④ 통화승수는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작아진다.
- ⑤ 화폐공급에 내생성이 없다면 화폐공급곡선은 수직선의 모양을 갖는다.

107.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피셔가설은 ‘명목이자율=실질이자율+물가상승률’이라는 명제로서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금융거래에 미리 반영됨을 의미한다.
- ② 새케인즈학파에 의하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사회적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실제 물가상승률이 예상된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경우, 채권자는 이득을 보고 채무자는 손해를 본다.
- ④ 실제 물가상승률이 예상된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경우, 고정된 명목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기업 사이의 관계에서 노동자는 이득을 보고 기업은 손해를 보게 된다.
- 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발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장기계약이 활성화되고 단기계약이 위축된다.

108.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재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자재 혹은 자본재 등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두 물가지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③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 상품의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한다.
- ④ 물가수준 그 자체가 높다는 것과 물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 ⑤ 물가지수를 구할 때 모든 상품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반영한다.

109. 수요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화가 기펜재라면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는다.
- ② 두 재화가 서로 대체재의 관계에 있다면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는다.
- ③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 상에 위치한 두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동일하다.
-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면 가격변화에 따른 판매총액은 증가한다.
- ⑤ 수요곡선이 수직선일 때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이다.

110. 우유의 수요곡선은  $Q_d = 100 - P$ , 공급곡선은  $Q_s = P$ 이다. 정부가 우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게 개당 2의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P$ 는 가격,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이다.)

- ① 정부의 보조금 지급액은 101이다.
- ② 보조금 지급 후 판매량은 52이다.
- ③ 보조금의 수혜규모는 소비자가 생산자보다 크다.
- ④ 보조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1이다.
- ⑤ 보조금 지급 후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우유 가격은 50이다.

111. A국은 세계 철강시장에서 무역을 시작하였다. 무역 이전과 비교하여 무역 이후에 A국 철강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세계 철강시장에서 A국은 가격수용자이며 세계 철강 가격은 무역 이전 A국의 국내 가격보다 높다. 또한 무역 관련 거래비용은 없다.)

- ㄱ. A국의 국내 철강 가격은 세계 가격보다 높아진다.
- ㄴ. A국의 국내 철강 거래량은 감소한다.
- ㄷ. 소비자잉여는 감소한다.
- ㄹ. 생산자잉여는 증가한다.
- ㅁ. 총잉여는 감소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12. A재의 시장수요곡선은  $Q_d = 20 - 2P$ 이고 한계비용은 생산량에 관계없이 2로 일정하다. 이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와 비교하여 독점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는 얼마인가? (단,  $Q_d$ 는 A재의 수요량,  $P$ 는 A재의 가격이다.)

- ① 8                      ② 16                      ③ 20                      ④ 32                      ⑤ 40

113. 정부의 가격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장은 완전경쟁이며 암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설정한 최고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② 가격하한제는 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③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하지만 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④ 전쟁 시에 식료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시장균형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⑤ 시장 균형가격보다 낮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하고, 공급량은 감소한다.

114.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곡선은  $Q_d = 8 - 0.5P$ 이고 공급곡선은  $Q_s = P - 4$ 라고 할 때, 균형가격( $P$ )과 소비자잉여( $CS$ )의 크기는? (단,  $Q_d$ 는 수요량,  $Q_s$ 는 공급량이다.)

- ①  $P = 4$ ,  $CS = 8$                       ②  $P = 4$ ,  $CS = 16$                       ③  $P = 8$ ,  $CS = 8$   
 ④  $P = 8$ ,  $CS = 16$                       ⑤  $P = 10$ ,  $CS = 8$

115. A 기업의 생산함수는  $Q = 12L^{0.5}K^{0.5}$ 이다. A 기업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각각  $L = 4$ ,  $K = 9$ 일 때, 노동의 한계생산( $MP_L$ )과 평균생산( $AP_L$ )은?

- ①  $MP_L = 0$ ,  $AP_L = 9$                       ②  $MP_L = 9$ ,  $AP_L = 9$                       ③  $MP_L = 9$ ,  $AP_L = 18$   
 ④  $MP_L = 12$ ,  $AP_L = 18$                       ⑤  $MP_L = 18$ ,  $AP_L = 9$

116. 독점기업의 가격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독점기업이 시장에서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가격차별 전략이다.  
 ② 1급 가격차별의 경우 생산량은 완전경쟁시장과 같다.  
 ③ 2급 가격차별은 소비자들의 구매수량과 같이 구매 특성에 따라서 다른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 발생한다.  
 ④ 3급 가격차별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가격차별이 성립한다.  
 ⑤ 영화관 조조할인은 3급 가격차별의 사례이다.

117. 쿠르노(Cournot) 경쟁을 하는 복점시장에서 역수요함수는  $P = 18 - q_1 - q_2$ 이다. 두 기업의 비용구조는 동일하며 고정비용 없이 한 단위당 생산비용은 6일 때, 기업1의 균형가격과 균형생산량은? (단,  $P$ 는 가격,  $q_1$ 은 기업1의 생산량,  $q_2$ 는 기업2의 생산량이다.)

- ①  $P = 10, q_1 = 2$                       ②  $P = 10, q_1 = 4$                       ③  $P = 14, q_1 = 4$   
 ④  $P = 14, q_1 = 8$                       ⑤  $P = 14, q_1 = 10$

118.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니계수 값이 커질수록 더 불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② 십분위분배율 값이 커질수록 더 균등한 소득분배를 나타낸다.  
 ③ 모든 구성원의 소득이 동일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④ 동일한 지니계수 값을 갖는 두 로렌츠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⑤ 전체 구성원의 소득기준 하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10%를 벌면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이다.

119. 우리나라 고용통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모가 경영하는 가게에서 무급으로 하루 5시간씩 주 5일 배달 일을 도와주는 아들은 취업자이다.  
 ② 학생은 유급 파트타임 노동을 하더라도 주로 하는 활동이 취업이 아니므로 취업자가 될 수 없다.  
 ③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 고교 졸업생 중 취업자는 줄고 대학진학자가 증가하였다면, 취업률은 감소하지만 고용률은 변화가 없다.  
 ④ 실업률은 '(100% - 고용률)' 이다.  
 ⑤ 실업자 수는 취업률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20. 시간당 임금이 5,000에서 6,000으로 인상될 때, 노동수요량이 10,000에서 9,000으로 감소하였다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단,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절대값이다.)

- ① 0.67%                      ② 1%                      ③ 0.5                      ④ 1                      ⑤ 2

121. 생산물에 물품세가 부과될 경우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단,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며, 생산에서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

- ① 고용은 감소한다.                      ② 임금은 상승한다.  
 ③ 구매자가 내는 상품가격이 하락한다.                      ④ 노동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⑤ 노동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122. 수요독점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은? (단, 상품 시장은 독점이고 생산에서 자본은 고정되어 있다.)

- ① 한계비용과 임금이 일치
- ② 한계비용과 평균수입이 일치
- ③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와 임금이 일치
- ④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한계노동비용(marginal labor cost)이 일치
- ⑤ 노동의 한계수입생산(marginal revenue product)과 한계노동비용이 일치

123.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완전경쟁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화되면 고용은 줄어든다.  
 ㄴ. 단기 노동수요곡선은 장기 노동수요곡선보다 임금의 변화에 비탄력적이다.  
 ㄷ. 채용비용이 존재할 때 숙련 노동수요곡선은 미숙련 노동수요곡선 보다 임금의 변화에 더 탄력적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24. 소득-여가 선택모형에서 A의 효용함수가  $U = Y + 2L$ 이고, 총가용시간은 24시간이다. 시간당 임금이 변화할 때, A의 노동공급시간과 여가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U$  = 효용,  $Y$  = 소득,  $L$  = 여가시간이다.)

ㄱ.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언제나 노동공급시간을 증가시킨다.  
 ㄴ. 시간당 임금이 1이면 노동공급시간은 3이다.  
 ㄷ. 시간당 임금이 3이면 여가시간은 0이다.  
 ㄹ. 시간당 임금이 3에서 4로 상승하면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공급시간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25. 노동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육과 현장훈련을 받는 행위를 인적투자라고 한다.
- ② 선별가설(screen hypothesis)은 교육이 노동수익을 높이는 원인이라는 인적자본 이론을 비판한다.
- ③ 똑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상응가치(comparable worth)원칙이라고 한다.
- ④ 이중노동시장이론에 의하면, 내부노동시장은 하나의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을 말한다.
- ⑤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노동시장을 2차 노동시장(secondary labor market)이라고 한다.

## [개선사항 및 향후 일정 안내문]

### □ 주요 개선사항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수험자의 응시편의를 위해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 시험전일 18시부터 시험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시험실 사전 안내 메시지(알림톡) 발송 (알림서비스에 수신 동의한 수험자 대상)
- ▶ Smart Q-finder(시험실 바로가기) 수험표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확인 또는 큐넷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에서 확인

#### 2. 시험 합격자에게 합격축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영어(토익) 성적 다이렉트 등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기존 대행사를 통한 유료 온라인 제출과 달리 큐넷 - 토익 성적전산시스템 상호 연동으로 큐넷에서 바로 등록 및 자동 승인됩니다.

#### 4. 객관식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가답안을 조기 공개합니다. ▶ 시험당일 : 17:00 → 14:00

☎ 수험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며, 우리공단은 「고객매우만족 10점 만점에 10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향후 일정

- 의견제시 및 가답안 공개 : 5. 19(토) 14:00 ~ 5. 25(금) 18:00
- 합격자 발표 : 6. 20(수) 09:00  
- Q-net 공인노무사 홈페이지(60일간) 및 ARS 1666-0100(4일간)
- 제2,3차시험 원서접수 : 7. 9(월) 09:00 ~ 7. 18(수) 18:00
- 제2차시험 시험일자 : 9. 1(토) ~ 9. 2(일)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 10. 31(수)
- 제3차시험 장소, 일정 공고 : 11. 5(월) 예정

### ※ 공인노무사 자격 관련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직업 및 취업정보) 워크넷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자격증 발급)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